

머리말

한반도 신홍안보의 세계정치

김상배

최근 환경안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난민안보 등과 같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분야의 위험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는 '비전통안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불렸지만, 현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책에서는 신흥안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신흥안보는 시스템 내 미시적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여 임계점을 넘게 되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화되는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안보문제이다. 신흥안보 현상은 각기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던 문제들의 이슈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상호 간에 위험을 강화하는 상승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동학이 가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신흥안보의 문제가 지정학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고 역으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신흥안보문제의 창발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신흥안보문제가 시스템 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복잡계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시도한 신흥안보의 논의는 기존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 문제를 보던 시각이 전제로 했던 인과적 방향을 반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를 나누고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시작해서 전통적 난제인 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시각처럼 비전통안보가 전통안보 분야에 비해서 해결이 더 용이하다고 보기에 오늘날 신흥안보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상당히

복잡한 이해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최근의 양상은 신흥안보 위험을 간과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통안보 분야의 위기를 촉발할 정도로 안보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신흥안보의 특성상 창발하는 위험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연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도 안고 있다. 복잡한 상호작용과 밀접한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안보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위정치 영역에서 시작해서 상위정치 영역으로 나아가겠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흥안보 현상들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발생한 사건들만 보아도,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피해,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중국의 원전 건설 붐에 대한 우려 및 한국 고리 원자로의 노후화에 따른 불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중 사이버 갈등, 동남아와 한국에서 발병한 사스(SARS)와 메르스(MERS),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의 공포,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및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제는 평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아직 수면 아래 있지만, 특정한 계기와 조건하에서 거시적 차원의 안보문제로 창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신흥안보문제들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이들 신흥안보문제들이 국가 간 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존의 국내 연구가 이러한 신흥안보의 동학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기존 연구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신흥안보의 위험이 전통안보의 문제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향후 연구는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메커니즘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脫)지정학적 배경을 가진 신흥안보의 쟁점이라고 할지라도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정학의 논리를 따라서 발생하고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신흥안보 위험이 임계점을 넘어 거시적 안보위험이 되는 것은 각 신흥안보 이슈의 내부 창발 과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동북아와 한반도에 존재하는 고유한 지정학적 요소들이 다양한 신흥안보문제가 창발하는 과정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전통안보의 문제로 협력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에서 신흥안보문제가 논란거리가 된다면, 그 위험은 더욱 급속히 상승작용의 계단을 타고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담기 위한 시도로서 이 책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제안하였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지정학적 시각은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흥안보의 세계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19세기 국제정치 현실에서 잉태된 고전지정학의 시각을 복원하여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신흥안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정학의 시각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의 시각 이외에도 이를 비판적으로 보완하고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복합적

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고전지정학과 비판지정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非)지정학과 탈(脫)지정학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개념화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이 책이 던지는 연구질문은, 신흥안보의 성격과 복합지정학의 논리 간에 일종의 상호 친화성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특정한 유형의 신흥안보 이슈들이 복합지정학 중에서도 특정한 유형의 '지정학'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학'이 발현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신흥안보 이슈는 고전지정학의 논리를 내재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국가 간 갈등으로 귀결되지만, 어떤 종류의 신흥안보 위험은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비지정학 또는 탈지정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던져 볼 수 있는 또 다른 연구질문은, 특정한 유형의 신흥안보의 위험과 거기에서 유발된 복합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거버넌스의 양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신흥안보의 유형과 이에 친화적인 거버넌스의 양식을 이론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가능할까? 신흥안보의 유형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대응모델을 상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 그리고 거버넌스 양식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 또는 친화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밝히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 책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앞서 살펴본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 즉 신흥안보의 위험들이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성의 사다리를 타고 창발하여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게 될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펼쳤다. 특히 복합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반도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이 여태까지 전개된 양상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이 책에서 제기한 이론적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신흥안보의 이슈들을 전통 자연재해, 기술시스템,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 자연시스템 등에서 야기되는 위협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들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대규모 자연재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포스트 휴먼 위협, 동아시아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인구안보, 이주·난민 안보, 사회안보, 기후변화안보, 에너지·식량·자원 안보, 보건안보 등의 문제들을 선별하였다.

이 책은 크게 이론과 사례를 담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분석틀'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담은 다섯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1장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 이론적 논의'(김상배)는 이 책의 각 장이 공통적으로 원용한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이론과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담았다. 신흥안보는 미시적 안전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되면서 어느 순간에 거시적 안보로 창발하는 안보문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신흥안보는 위협의 대상과 성격 및 해결주체,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 주로 국민국가 단위에서 군사안보를 강조했던 기존의 전통안보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안보 위협이 임계점을 넘어 거시적 안보위험으로 창발하는 과정에는 신흥안보의 내적 요인 이외에도 외부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여전히 전통안보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경우는 지정학적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1장은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지정학 또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에 주목한다. 복합지

정학은 기존의 고전지정학 이외에도 비판지정학과 비지정학, 그리고 탈지정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복잡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1장은 다양한 종류의 신흥안보 위협과 복합지정학의 특정한 요소들이 일종의 상관관계를 갖느냐의 여부를 이해하는 이론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흥안보의 성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창발적 안보와 복잡성 패러다임: 신흥안보 개념의 비판적 고찰'(민병원)은 탈냉전기를 맞이하여 '안보' 개념의 전통적 속성과 그것의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본 후에 그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였다. 안보 개념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탐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되는데, 탈냉전기에 들어와 안보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닫힌 시스템'의 맥락에서 제기된 고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지정학의 초기 모습 역시 닫힌 시스템의 사고를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열린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안보 개념의 이론화도 한층 더 진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코펜하겐 학파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정치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담론의 의미와 한계점을 짚어본 후 자기조직화와 카오스, 창발성 등 복잡계 패러다임의 개념들이 안보와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2장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안보환경을 새롭게 그려내고자 도입되고 있는 '신흥안보'의 개념이 복잡계 패

러다임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신흥안보의 개념이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외연의 확대가 과연 어느 정도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3장 '동북아시아 지역공간의 복합지정학: 안보-경제-정체성 넥서스'(손열)는 동북아시아 지역공간이 냉전기 안보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전지정학 및 지경학(geo-economics) 논리가 지배하였던 반면,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경제 영역의 비지정학화(혹은 탈지정학화)가 진전되는 동시에 문화 영역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세 영역 간 연쇄반응(chain reaction)이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동북아는 경제적 경쟁, 안보 긴장, 정체성 갈등이 부정적 연쇄반응을 야기하고 불안정한 악순환의 연쇄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보경쟁은 정체성 갈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안보적 대결의 확대를 자제하게 하는 경제적 압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북아 공간에서 전개되는 안보, 경제, 정체성의 선순환 혹은 악순환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음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3장은 강조한다. 신흥안보 위협의 창발은 이러한 동북아 위협 넥서스와 연결되어 국가 간 협조의 동학 속에서 완화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로운 안보위협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추동할 수도, 반대로 역내 국가 간 갈등이 새로운 안보위협을 증폭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거버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간 협력의 논리와 함께 탈근대적으로 탈지정학적 운동의 논리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복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되어야 한

다고 제3장은 강조한다.

제4장 '남북한 관계의 복합지정학'(전재성)은 한국의 지정학적 사고는 한반도가 겪어온 격동의 국제정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주권국가질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었고 냉전을 거치면서 서구의 단순 고전지정학의 사유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영토와 주권, 군사력이 중요한 생존의 기반이었고,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제약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분단은 극복되지 못한 채, 강대국 국제정치와 남북 간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고전지정학 사고를 넘어 점진적 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정학 논리에 영향을 받아 화해, 협력을 이끄는 추동력이 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으로 지정학의 대립을 완화하거나, 분단국가로서 영토성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대한 안보, 생존딜레마 속에서 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지경학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경협은 한계를 노정했다. 지정학적 영향력이 훨씬 약한 환경, 재난, 질병 등의 신흥 안보이슈가 남북한 지정학 경쟁을 완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치, 경제 이슈보다 정치적 민감성이 덜하고, 북한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 다자협력의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의 지정학 경쟁이 그 속에서 완화될 수 있다. 국가들의 리더십 발휘와 영향력 있는 제3자의 중재가 존재한다면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5장 '한반도 신흥안보의 네 가지 등장 경로'(조동준)는 한반도

에서 신홍안보가 등장하는 경로를 넷으로 분류한다. 첫째, 안보 쟁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안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 정도가 증가하여 안보 쟁점으로 새롭게 인정을 받는 경로이다. 1980년대까지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1990년대 들어 테러의 빈도가 급증하고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테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연재해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로이다.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고난의 행군’은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집중강우와 기상이변이 대량 홍수, 농경지 유실, 병충해 방제 실패 등으로 이어져 대량 아사를 초래하였다. 셋째, 자연재해가 국가안보와 연결되면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가 이미 매설된 남북한의 지뢰 유실을 초래하였고 한국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다. 지뢰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어났다. 넷째, 안보 쟁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안을 안보 쟁점으로 포장하여 신홍안보가 등장하는 경로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인간안보’는 안보화로 인하여 신홍안보 쟁점이 부상하는 경로를 보여준다. 물질적 결핍과 생존 공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1994년 유엔개발계획은 개인 차원에서 물질적 결핍과 생존 공포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인간안보’로 규정하였다.

제2부 ‘한반도 신홍안보의 세계정치’는 경험적 사례들을 기술시스템, 인간안보,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 자연시스템 등의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6장 ‘기술환경과 신홍안보의 복합지정학: 남북한 관계의 맥락’ (배영자)은 새로운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 가운데 특히 원자력발전,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기술에 주목하고, 해당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신홍안보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원자력 발전은 일상적인 안전 문제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거시적 안보 이슈로 발전할 수 있는 이슈이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도 개인 수준의 안전 문제가 국가안보로 확대되고 있는 사례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 그 영향력의 범위가 막대하여 로봇 전쟁, 각종 스마트 무기의 부상 등 다양한 거시적 지정학적 안보로 확대될 수 있는 이슈이다. 원자력발전,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협은 미시적이거나 가상적인 위협에 그치지 않고 안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상황에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 지정학적 위협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신기술 활용과 관련된 위협을 전통적인 안보 개념과 지정학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기술로 인한 위협과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생각할 때 복합지정학적 관점이 요구된다. 예컨대 신기술 위협과 방어는 지리적 영토와 사이버 공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신기술의 경우 기술적 우위가 공격 및 방어 능력의 우위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 우위로 인해 공격과 방어가 취약해지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점, 신기술을 활용하는 위협의 경우 실재하는 위협과 구성되는 위협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존재하며 특정한 국내외 정치상황에서 과잉 안보담론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신기술 위협에 대한 적절한 안보담론의 구성이 문제시된다는 점 등을 인식하며 복합지정학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7장 ‘인구·이주·난민 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이신화)는

인구, 이주, 난민 문제와 관련된 신홍안보의 문제를 다루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홍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홍안보 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 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홍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 차원의 협력 문제는 부차적 관심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7장은 어떤 특정한 신홍안보 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홍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 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 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제8장 '경제위기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이왕희)는,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은 전통적인 지정학의 영역을 넘어서 지정학과 지경학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1세 들어 미국에서 발

생한 세계금융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 경제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지정학적 위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세계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위기는 한국과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폐쇄경제인 북한에 비해 개방경제인 한국이 경제위기의 위협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와 경제체제로 경제성장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한국만 경제위기에 처하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아주 희박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금융위기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점증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지정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경제위기와 관련된 그 파급 범위가 무한하여 위협을 조기에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정부가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인 다국적·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자간 및 다자간 네트워크를 심화·확대할 중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9장 '사회환경의 신홍안보와 복합지정학: 경제적 불평등·사회통합·정체성 안보'(이승주)는 최근 급격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21세기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안보적 차원의 문제를 초래하는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는 한국에게도 당면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난 20여 년간 확대되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구조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로 전화하고 있다. 남북한 간 경제통합, 더 나아가 통일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현실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 경제적 불평등은 기존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불평등에 더하여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간 경제통합 또는 통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며,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질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한국의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 제9장의 우려이다.

제10장 '환경의 복잡지정학과 한반도'(신범식)는 자연환경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들 가운데, 그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도전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적 상황을 고찰하였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는 강수량 변동에 따른 물부족 위험이 높아가고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른 보건적 취약점의 증대, 그리고 토지의 작황 및 바다 산물의 변화에 따른 먹거리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연환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충돌을 발생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는 도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에너지안보와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흥안보의 이슈로는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량가격 폭등 및 그에 따른 불안정 상황을 들 수 있다. 에너지 수급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이 초래할 산업에 대한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나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로 그 심각성을 일깨운 보건안보의 문제는 동북아와 남북관계의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16억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에서 초국가적 보건협력 지대의 구축은 국가중심적 영토성의 원칙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 협력 기제의 미발달 또한 이 지역의 보건안보를 위한 주요한 도전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촉발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재해 자체에 대한 대비 못지않게 그것과 연계되는 이주 및 국가 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자원, 식량, 에너지 등과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연계(nexus)되어 복합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대응을 넘어서 지역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아직 생소한 신흥안보의 개념을 동북아와 한반도의 사례에 적용하는 쉽지 않은 주제의 탐구 작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사실 이 책에 담긴 한반도 신흥안보의 복잡지정학에 대한



연구는 지난 4-5년 동안 진행해 온 몇 갈래의 연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미래전략네트워크(일명 미전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공부모임이 이 책에 실린 신흥안보 연구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잉태되는 등지가 되었다. 복합지정학에 대한 이론적 발상은 '통일의 신지정학'을 주제로 내건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의 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생산되었다.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이론적 논제를 동북아와 한반도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의 계기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미래세계정치센터와 복합안보센터의 '신흥권력의 부상과 중견국 미래전략' 연구에서 마련되었다. 이들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 그리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와 국가전략에 대한 담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토양이 되었다. 이상의 프로젝트들에 모두 참여하여 지난한 작업을 같이 해준 신범식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여러 모로 격려해 주신 운영관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성심껏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 관계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원고 교정 작업을 도와준 000의 수고도 고맙다.

2017년 7월 1일

김상배